

2019년 객관식 소방공무원법 정오표(19.8.9)

페이지(p)	오(수정 전)	정(수정 후)
p 17 28번 A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p 17 28번 해설	경기 소방본부장 부산·인천·충남·전남·경북	경기 소방본부장, 부산 소방본부장 인천·충남·전남·경북·강원·경남
p 33 80번 정답	G	A
p 33 80번 해설	회의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합의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합의
p 48 15번 해설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청장
p 63 54번과 55번 문제 및 해설 p 64 56번 해설	0.5퍼센트 0.3퍼센트 0.1퍼센트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p 64 57번 문제 및 해설	0.5퍼센트 0.4퍼센트 0.3퍼센트 0.2퍼센트 0.1퍼센트	5퍼센트 4퍼센트 3퍼센트 2퍼센트 1퍼센트
p 67 64번 정답	A	B
p 73 78번 정답	G	M
p 75 85번 해설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시행령 제49조 제3항
p 103 24번 정답	M	G
p 116 63번 문제 p 117 65번 문제	인사기록카드	인사기록
p 119 71번 문제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p 122 79번 문제	직위해제소방공무원의	소방공무원의
p 176 107번 문제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p 186 12번 해설 ①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사람
p 198 44번 문제 B	승진예정인원수	승진임용예정인원수
p 205 64번 문제 A	20SUS	20년
p 220 107번 해설②	소방위의 경력평정점	소방장의 경력평정점
p 221 110번 M	승진임용	승진심사
p 230 11번 해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삭제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p 235 25번 해설 ③	16조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16조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p 250 66번 G 및 해설	특수 환경	특수근무환경
p 254 76번 문제 B 및 해설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합의에 따른다.

p 254 77번 G p 271 127번 B	회의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합의에 따른다.
p 270 정답 표시		121. G 122. A 123. A
p 272 정답 표시		128. B 129. B 130. M
p 302 정답 표시		59. B
p 311 83번 문제	징계의결서에	징계의결서 이유란에
p 311 83번 A,B,G,M 대체 (개정, 19.8.6)		A.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B.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G. 관계 법령 M.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인적사항
p 311 83번 해설 대체 (개정, 19.8.6)		M 틀림,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징계 또 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징계령 제14조 제2항, 개 정 19.8.6.) ㉠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 증거의 판단 ㉢ 관계 법령 ㉣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p 325 118번 해설	해임부터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을 수를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 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p 325 119번 문제	징계등 의결서에	의결서 이유란에
p 325 119번 A,B,G,M 대체 (개정, 19.8.6)		A.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B. 증거의 판단 G. 관계 법령 M. 의결방법
p 325 119번 해설 대체 (개정, 19.8.6)		M 틀림,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징계 또 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징계령 제14조 제2항, 개 정 19.8.6.) ㉠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 증거의 판단 ㉢ 관계 법령 ㉣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소방공무원법승진임용규정 개정 [2019. 6. 25, 개정, 시행 2019. 7. 1]

※ 제41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신설

제41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 ①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②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법 개정 내용 정리

1. **특별승진의 제한** : 명예퇴직 공로자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금품·향음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등과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특별승진의 취소** : 명예퇴직 공로자로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규정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고충처리규정[시행 2019. 4. 17] [2019. 4.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 내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며,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는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5857호,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등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하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충 해소를 위해 고충상담의 처리 및 임용권자 등에 대한 인사혁신처장의 고충처리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고충처리대상 및 처리 절차의 명확화(제2조, 제2조의2 신설)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나 성폭력범죄·성희롱 및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 고충처리는 고충상담, 고충심사 및 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처리로 구분함.

- ① 고충처리는 고충상담, 고충심사 및 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처리로 구분한다.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와 인사혁신처장은 고충상담이나 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 고충상담 : 고충을 제기한 사람(청구인)의 동의
 - ㉡ 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 피해자의 동의
- ③ 임용권자등은 상·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언행, 신체적 접촉 또는 위법·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 심사가 청구된 경우로서 고충의 신속한 조사 및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심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은 임용권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의 이행 및 그 결과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
 - ㉢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 ㉣ 가해자 등 책임자에 대한 조치
 - ㉤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2)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사안 구체화(제3조의6제5항 신설)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으로서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이나 직무권한의 부당한 행사로 인한 고충 등의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

(3)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한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의 의무(제14조 신설)

임용권자 등은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상담 창구 마련, 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 고충실태 조사 및 현황 보고 등을 하도록 함.

(4) 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및 조사 절차(제15조 신설)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범죄·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임용권자 등에게 조사 실시를 요청하거나 직접 조사하도록 함.

(5)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 ①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 ②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 ③ 제3조의7제2항(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위원의 수를 조정한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 설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수, 조직 규모 및 관할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청 훈령) 개정(시행 19.6.25)

1. 중점관리대상 비위행위 신설에 따른 징계양정기준 신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징계양정의 기준, 2019.6.25.>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파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제2호(공금 횡령·배임·유용)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부작위·직무태만, 회계질서문란 라. 소극행정 마.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 고발 의무 불이행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사. 부정청탁 아. 상여금 부정 수급 자. 공무원행동강령 13조의3부당행위 차. 부당한 행위에 무대응, 은폐 카. 기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감봉·견책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가.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수·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4와 같음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 제1호아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2.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상향 조정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 음주운전 징계기준: 전면 개정>

음주운전 유형		징계요구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	경·중징계	정직 - 감봉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측정거부)	중징계	강등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인적 피해 후 도주	파면 - 해임
		물적 피해 후 도주	해임 - 정직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분야로 채용되어 필수보직기간 중 소방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3. 담당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행위자를 담당자로 개정하고 담당자가 10조의2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의 경우 담당자를 문책기준에서 제외
별표 2(담당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의 기준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결재권자)
중요한 정책결정(고도의 정책)사항		3	2	1
일반적인 정책결정사항	3	1	2	4
중요한 단순반복업무	1	2	3	4
경미한 단순반복업무	1	2	3	
단독행위	1	2		

※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 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의미함.

4.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

(1) 징계면제 :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 ①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거나 현장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 ①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②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3) 감사원 등의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 :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위의 징계면책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징계면제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징계위원회는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시행 2019. 8. 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징계 등 심의 대상자가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의견서에 징계 등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의 의결을 할 경우에 징계 등의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심의하여 의결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제1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신설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피해자의 진술로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4조제2항(징계등 의결서) 기재사항 개정

"그 의결서"를 "의결서의 이유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 2) 증거의 판단
- 3) 관계 법령
- 4)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